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자금지원 본격

김윤덕 국토부장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 최종 선정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본격화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미래도시펀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공사비 등을 HUG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정책펀드로,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미래도시펀드 모펀드는 올해 상반기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별로 최대 200억원의 초기사업비 용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결성될 사업장별 미래도시펀드



자펀드는 총 사업비의 최대 60% 범위 내 공사비 등에 대해 대출을 진행하며, 모펀드는 자펀드 자금 모집의 마중물 역할(자펀드 규모의 10~20% 출자)을 수행한다.

미래도시펀드는 사업 초기부터 사업 시행자에 저렴한 금리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협상력을 제고하여 사업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장관은 "지난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책 지원 결

과 성남·안양·군포에서 8개 구역의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지자체·정비사업지원기구(LH, HUG 부동산원, LH 등)는 주민대표단 수립,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전문가 사전 컨설팅 제공, 전자동의시스템 마련 등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8개 구역은 정비예정구역 지정부터 통상 30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6개월 내외로 2년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지정된 구역들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미래도시펀드의 자금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나머지 선도지구 7개 구역에 대해서도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HUG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펀드 자금요구를 감안하여 미래도시펀드 2호 모펀드도 단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며, 총 12조원 규모로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미래도시펀드 운용사 선정에 따라 금융 지원을 통한 주민의 사업비 부담 경감과 사업성 개선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기대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 “정부 5극 3특 전략 전북 역차별 안된다”

민주 안호영 의원 “특별자치도 재정 권리 보장해야”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기획재정부)은 29일 전주·진안·무주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정책적 시각자대로 내모는 역차별 구조”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일관성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전북과 강원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며 독자적 발전을 주문해 놓고 이제 와서 광역자치단체 통합특별시에만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자기부정”이라며 “통합특별시의 특례가 특별자치도보다 강력하다면 기존 특별자치도 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전북의 낮은 재정자립도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재정자립도 23.6%에 불과한 전북에 이러한 정책적 소외는 치명적”이라며 “특별자치도법에 교부세 확보 장치를 명시한 이유도 재정 기반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은 29일 배포한 성명에서 “통합 광역단체에 대규모 재정 혜택을 집중하는 현행 5극 중심 설계는, 이미 특별자치도로 독자적 발전을 선택한 전북과 같은 지역의 위상과 권한을 오히려 격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한정된 균형발전 예산 안에서 통합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구조는 비통합 지역의 몫을 줄이는 제로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밀려나는 지역이 아니다”라며 “차별을 달고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개척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아픈손가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5극 3특 전략을 멈추고 전북이 당당한 국가 성장의 한 축이 되는 진정한 5극 3특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전북의 재정 주권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 · 진안=우태만 기자

## 정읍·고창 배수개선 사업 예산 272억 확보

민주 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29일, 정읍·고창 지역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2026년 배수개선사업 예산으로 총 272억 6,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계속지구 11개 지구, △신규지구 6개 지구(착수지구 3개 지구, 기본조사지구 3개 지구)로, 집중호우 시 반복적인 침수를 겪어온 지역 농경지의 배수 원활화와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배수개선사업 계속지구는 정읍 평령지구(42억9,200만원)·석우지구(40억원)·용흥지구(40억원)·백운3지구(23억원)·평령2지구(25억원), 고창 고창지구(7억7,200만원)·강남지구(34억4,100만원)·신림지구(20억원)·신평지구(11억원)·송산지구(11억원)·해룡지구(11억원) 등 총 28억 5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신규로 배수개선사업이 착수되는 신규 착수지구는 정읍 오곡지구, 고창 우평지구·성내지구 등 3곳으로 세부설계 예산 3억원(지구당 1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기본조사지구로 정읍 용산지구(9,100만원)·태창지구(1억5,000만원), 고창 신림2지구(1억1,900만원)이 포함되어 기본조사 후 최종 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김영식기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 제출과 관련해”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 제출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전북에 특화된 종목 선택 · 집중으로 경쟁력 강화”

도의회 문안위, 전북체육회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체육 역사박물관 소장품 관리 · 선수 처우 개선 필요성 언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9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역사박물관 조성, 실업팀 선수 처우 개선, 특화 종목 육성, 대표 선수관련 인프라 구성, 도민체육대회 준비 등 선수와 관련된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역사박물관 조성과 관련해 현재 소장품을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며, 소장품이 약 4,500점까지 수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집 못지않게 보관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좋은 소장품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박물관 설립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선수 육성과 선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무리 좋은 선수를 길러도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면 의미가 없고 선수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선수 영입비 지원과 처우·보수 개선 등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전주0)은 도내 실업팀 육성 현황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과 여건을 고려할 때 모든 종목목을 고르게 육성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정 종목목을 도와 여러 시·군이 함께 강화해 나가면, 내부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북 대표 선수가 탄생하고, 나아가 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목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길 당부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2026년 전주 올림픽 홍보대사를 위촉과 관련해 홍보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선수인데 관련된 체육인프라가 도내에 구축 되어 있는지를 질의했다. 홍보대사 위촉 여부를 떠나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선수들이 있다면, 국이나 전국 단위 예산을 연계해 이와 관련된 경기장을 조성함으로써 전북 체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수들이 땀을 흘리는 공간 확보와 선수들을 영입하는 부분도 체육회에서 신경써줄 당부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선수 복지포인트 지원 현황을 확인했으며, 선수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은 모두가 동일한 만큼 소외 종목 선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만남을 통해 심리적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포츠는 투자한 만큼 성과로 이어지는 분야인 만큼, 선수 영입비의 현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8회 도민체육대회를 전담이 주최하고 있는데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경기장이나 교통 등을 지적하며 도민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했다.

/1만호 기자

## 사진으로 ‘익산의 일상·가능성’ 공유

혁신당 익산지역 출마 예정자 4명, 내달 7~11일 사진전

조국혁신당 익산 지역 출마 예정자들로 구성된 ‘희망캠프 4인(임형택·김영민·박경원·박종희)이 기존 정치권의 출마기념회를 대신해 공동 사진전을 열며 시민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났다.

이들은 오는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 전시관에서 사진전 ‘익산에서 마주한 희망!’을 열고, 익산의 일상과 기억, 도시의 가능성을 사진으로 기록해 시민과 공유한다.

이번 전시는 한 개인의 전시가 아닌 네 명의 서로 다른 시선이 하나의 질문에 답하는 공동 기록으로, 정치적 구호보다 삶의 장면을 통해 익산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시는 희망·변화·사람들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만경강과 미륵사지, 익산역 등 도시의 기반과 일상을 담은 ‘희망’, 문 답은 상가와 도심 유희시설 등 과거를 직시한 변화, 아이들과 성인, 이웃의 모습을 담은 ‘사람들’ 파트를 통해 익산의 빛과 그늘을 함께 보여준다.

/1만호 기자 · 익산=이재춘기자



## 기본소득당, 완주서

귀농귀촌중앙회와 정책협약

기본소득당과 전국귀농귀촌중앙회는 29일 오후 2시 완주군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농어촌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농어촌기본소득 및 안정적인 귀농귀촌 사업 도입·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우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근 2년 만에 인구 25만 명이 감소한 농어촌의 극심한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가능하게 하는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정용준 전국귀농귀촌중앙회 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과 함께 이와 연계한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발굴·추진되어 위기에 놓인 농촌에 새로운 대안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1만호 기자

##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집중 점검 | 도의회 농복환위, 올 상반기 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29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산발 예방, 탄소중립 정책 등 환경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관련, 성립전 예산 투입을 통해 감염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

예산 확보와 함께 산주·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참여 유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재선충 방제 과정에서 과도한 타공 사례가 우려되며 전북도의 방제 방식을 점검하고, 산림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나무 크기에 맞춰 2~3개 구멍방을 뚫는 방식으

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정진 의원(남원1)은 국립공원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 문제를 언급하며, 산림을 활용한 치유·복지 정책 발굴과 함께 사방방 조성, 임도 개설 등 산림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형석 의원(김제2)은 혁신도시 인근 축분 처리장으로 인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1만호 기자

## 새만금 개발·수산해양 정책 실효성 점검

도의회 경산건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올 상반기 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9일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은 새만금 사업이 2050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반면, 도민 체감과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직접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부지·재생에너지 등 주요 현안을 한

번에 풀기보다 과제별로 집중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 물길 생산 비중이 큰데도 도내 가공 기업이 부족해 타지역으로 반출해 온 현실을 지적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전면 재검토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 기초 변화에 대한 도의 입장을 질의했다.

/1만호 기자